

# 3部 3色の 論理

글\_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ans@hankyung.com](mailto:ans@hankyung.com)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또 다시 갈등이다. 이들 부처의 갈등 그 자체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도 없다. 다만 그 주제가 끊임없이 바뀌어 왔을 뿐인데 이번에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5~1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로 다투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반도체니 차세대니 신성장이니 하면서 이들 부처가 내놓은 개발분야들을 보면 사실 별반 차이도 없는 데 무슨 갈등일까.

한마디로 서로 자기 부처가 말아야 한다는 주도권 다툼이다. 그것도 그냥 보통의 주도권 다툼이 아니다. 그동안 심심하면 통합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타인지 이들 부처는 마치 생존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때마침 정부 혁신위원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검토한다고 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청와대가 나서서 영역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 무슨 적당한 합의점을 찾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부처가 내세우는 논리를 들어 보면 임시 봉합밖에는 안될 것 같다.

과학기술부를 보자. 현 정부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내세웠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동안에도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조정역할을 해 왔다면서 과학기술부가 정말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연구개발을 제대로 이해하는 부처는 아직도 과학기술부밖에 없다고 은연중 강조하기도 한다. 신산업은 특히 기초연구와 유리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연구개발을 아는 과학기술부의 역할이 시대적 요구임을 힘주어 말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을 모르는 부처가 어찌 신기술과 신산업을 논하느냐고 반박이다. 또 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와 부딪치는 연구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이 특히 과학기술부와 비교할 때 훨씬 수요지향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는다. 나아가 신기술과 신산업은 기초 응용 개발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한때는 과학기술부더러 하라던 기초연구도 이제는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단연 정보기술(IT)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BT NT CT 등 다른 신기술도 IT와 융합될 수밖에 없다며 차세대 성장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정보통신부라는 것이다.

신대제 장관을 발탁해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바로 정보통신부보고 찾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재래산업을 이끌어 온 부처가 어찌 패러다임이 다른 IT 신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숨기지 않는다.

가히 '3部 3色の 논리'라고 할 만하다.

각 부처의 논리를 들어 보면 모두가 그럴 듯하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착각은 자유',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게 또한 이들의 논리이기도 하다.

먼저 과학기술부를 보자.

과학기술부 없이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될 수 없는가. 그것이 결코 아니라면 '과학기술중심사회 = 과학기술부 존재이유'라는 등식은 냉정히 말하자면 성립할 수가 없다.



기초연구가 신기술 신산업과 유리될 수 없을 정도로 핵심인 것은 분명 맞다. 하지만 그러기에 기초연구 부문을 과학기술부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기가 점점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연구개발을 조정하면서 다른 부처와 경쟁하는 듯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제기하는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도 과학기술부의 한계가 아닐까.

산업자원부는 또 어떤가.

수요지향적이라고 하지만 혹 지금까지 기업이 할 영역을 침범한 것은 아닐까. 높은 성공률이 기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만 선택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도 따져 볼 일이다.

이제는 기초연구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자원부가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엄연히 존재하는 불신을 쉽사리 해소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조정역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은 안 하는 대신 다른 전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역할(예산편성권과 함께)을 보장하라고 나온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산업부가 되겠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보통신부는 조직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

는 게 아닐까. 정보산업 자체만을 가지고 별도의 부처를 둘만큼 우리 나라는 한가롭지 않다. 정보산업급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보통신부는 틀림없이 통신서비스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분야는 경쟁정책 등을 다룰 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가 IT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융합을 강조하는 만큼이나 이런 융합에 걸맞게 산업자원부 등과 기꺼이 조직 융합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누구는 이들 부처의 중복과 갈등을 선의의 경쟁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 전체 파이가 커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경쟁의 결과가 전혀 피드백되지 않는 경쟁이 어찌 경쟁일 수 있을까. 양적 파이가 커졌는지 몰라도 질적 파이가 커졌는지는 진정 의문이다.

관리되지 않는 중복, 관리되지 않는 경쟁을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국가일까.

이들 부처의 소모적 갈등이 기술혁신은 고사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패거리와 줄서기 등 非과학기술적인 폐해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들 부처와 공무원들이 과학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과학기술이 이들 부처와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필자만이 헛갈리는 것일까.

이제는 뭔가 분명히 정리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⑤